

서울 한미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I. 머리말
- II.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세 차례 한미정상회담
- III.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쟁점 평가
- IV. 맺음말

I. 머리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보수-진보단체의 찬반집회가 벌어지는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조지 W. 부시의 방한은 어쩌면 대통령으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시아 순방여행의 출발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태국으로 갔다가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지난 4월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100차례가 열리는 등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홍역을 치렀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방한으로 열리게 된 세 번째 한미정상의 만남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열렸다.

한미정상회담은 국내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반발여론과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한미 양국정상회담에서는 서로에게 민감한 의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이루어진 세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개괄하였다. 다음으로,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쟁점을 '8.6공동성명'의 내용에 따라 평가해 보았다. 끝으로, 오는 11.4 미 대통령선거 이후 한미관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II.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세 차례 한미정상회담

1.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독도’ 해프닝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단행된 ‘독도 주권표기’의 원상회복 조치로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1차 정상회담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동으로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던 차에, 독도문제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2주 정도 앞두고, 미국 지명위원회(BNG)가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s)'로 되어있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로 표기하면서 국내에서 대소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7월 31일 부시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상회복키로 함으로써 파문은 1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를 두고 ‘한미동맹 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이며 ‘대일 외교전의 승리’라는 자화자찬의 평가도 나왔다.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예의 주장도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일견 그럴 듯한 이런 평가와 주장 속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 독도가 한일간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고, 독도와 관련된 결정권이 미국에게 넘어가는 꼴이 된다. 만의 하나, 미국이 독도문제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 이러한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이번 독도 주권표기 해프닝에 대해, ‘BNG로 하여금 독도 표기변경을 지시해 한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뒤 부시 대통령이 나서서 선심 쓰듯 원상 복구시켜 놓았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음모론일 뿐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독도 표기 해프닝에 잘못 대응할 경우, 한국은 미국에게 커다란 약점을 잡히게 된다. 미국이 독도문제를 적절하게 이용해 국익을 다투는 한미간 협상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부시 대통령의 조치는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미국 지명표기위원회의 잘못을 시정 조치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 지명위원회는 분쟁지역에 대해 제3의 중립적인 방식으로 표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이름도 이미 1977년부터 ‘리앙쿠르 바위’와 같이 중립적으로 표기해 오고 있다. 원래 한국령인 독도에 대해 미국은 중립입장을 내세워 여전히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독도 주권표기 원상조치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이 벌써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첫 번째는 한국 대통령의 방미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이다. 회담 직후에는 한미동맹을 ‘복원’ 시킨 매우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되었지만, 뒤이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추가협상 문제로 양국관계가 꺾기어졌다. 미국의 유력일간지 『워싱턴 포스트』(6.25)는 이명박 대통령을 “부시의 공식 애완견(lap dog)이었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대체할만한 강력한 경쟁자”라며 비아냥거리며, “백악관은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동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의 불만을 전달하였다.

두 번째는 일본 토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의 한미 정상간의 회동이다. 당초 일본 방문을 전후해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던 것이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8월로 연기되면서 긴급히 회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회동을 앞두고 미국 측이 부시 대통령의 방한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외교적 결례 논란이 있었다. 토야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 연내비준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협정(WVP) 가입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동이 당초 예정된 1시간을 다 못 채우고 이례적으로 40분 만에 끝나 한미관계 이상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번에 가진 한미정상회담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부시 대통령과 가진 세 번째 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어색해진 양국 정상의 우의와 신뢰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양국 정상은 한우 갈비와 미국산 스테이크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미관계의 ‘복원’을 과시하는 이벤트를 갖기도 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기 말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 최소한 10년의 미래비전을 합의하는 것이 무리라는 문제제기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공동선언’이 아닌 ‘공동성명’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한미동맹, △한미FTA, △북한문제, △포괄적 협력 등 네 가지 분야였다. 양국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한미정상 공동성명 주요내용(2008. 8.6)

한미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 전략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 지속 이행 ○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 ○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 번영에 기여
한미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분야의 항구적 버팀목 인식 재확인 ○ 한국 국회, 미 의회와 협력해 조속한 비준 노력
북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2단계 조치 진전 환영 및 핵신고의 철저한 검증체제 수립 ○ 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 부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지지 ○ 부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유감표명 및 남북대화 촉구

포괄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개발과 기후변화 공동대처 ○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한 협의 ○ 우주탐사, 우주과학, 원자력 평화이용 협력 ○ 한국대학생 미국 연수프로그램(WEST) 신설 ○ 연내 미국 사증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노력
-----------	---

Ⅲ.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쟁점 평가

1. 한미동맹 강화

(1) 아프간 파병문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 문제였다. 한국 내에서 독도 주권표기의 원상회복 조치를 미국의 ‘선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조치의 대가로 우리 정부에게 ‘선물’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돌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선물’의 내용이 ‘아프간 한국군 재파병’ 문제라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었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 비행기 안에서 미 국가안보회의 테니스 와일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가 ‘아프간 파병문제’를 꺼냈기 때문이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답변을 부시 대통령이 뒤집는 일이 일어나 순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가 논의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오늘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받아 부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논의했었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다만 내가 이 대통령께 유일하게 말한 것은 비전투 지원이었다”고 말해 상황을 수습했지만, 여기서 오역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논란이 확대됐다. 당시 통역사는 부시 대통령이 ‘비전투 지원(non combat help)’이라고 한 말을 ‘비군사 지원(non military help)’이라고 번역했다. ‘비군사 지원’이라고 하면 지방재건팀(PRT)와 같은 민간요원의 파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전투 지원’이라고 하면 엄연히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아프간에서 돌아온 동의, 다산부대의 활동은 ‘비전투 지원’이기는 하나 ‘비군사 지원’은 아니다.

정작 미국은 동의, 다산부대와 같은 ‘비전투 지원’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2008.8.6.)은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군(Korean troops)을 비전투 역할(a noncombat role)로 아프가니스탄에 재파견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할 경우 우리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지역 및 범세계

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하고,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초국가범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을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국측이 과병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군대과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측 인원이 과건되지 않고 경찰장비를 지원하거나 현지 경찰훈련교관의 초청연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아프간 선교에 나섰던 샘물교회 신도들의 피납사건으로 3명이 희생 당한데다가, 아프간 주둔 동요·다산 부대가 철수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측의 요구가 세지면, 국회의 과병 동의안이 필요 없는 경찰훈련요원의 과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방위비분담금 협정

한미동맹의 강화와 관련해 두 번째로 주목되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이미 실무차원에서 한미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깊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른바 ‘대미 퍼주기 논란’ 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이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의 예외협정으로, 한미양국은 1991년부터 2~3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해 왔다. 2006년에 체결한 제7차 협정의 시한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연내까지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핵심쟁점은 크게 △분담금 제공방식 변경, △한국 분담비율 산정, △분담금의 기지이전비 전용 등 세 가지다. 한국측은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현물제공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한국의 분담비율을 현재의 42%에서 50%로 늘려달라는 것과 분담금을 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한국은 미 2사단의 이전비용은 이미 합의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제17차 및 제18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도 협의되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뒤이어 7월21일 워싱턴에서 외교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측 협상단이 제1차 고위급협의를 개최하였고, 오는 8월말에는 서울에서 제2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 협상을 어떻게든 타결지은 뒤, 오는 10월 중순에 개최될 한미 안보협회의(SCM)에서 최종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미FTA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목됐던 한미FTA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머물렀다. 한미FTA를 경제분야의 항구적 버팀목으로 높게 평가하면서도 연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그쳤다. 이것은 비준 동의문제가 행정부의 권한이 아닌 한국 국회와 미 의회의 권한인데다가, 양국에서 한미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민주노동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주당도 한미FTA의 비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고, 미국에서는 유력한 대선후보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바마 후보는 지난 5월 23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FTA에 대해 “아주 결함 있는(badly flawed)” 협정이라고 지적하고, 의회 투표를 위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아예 제출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도 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FTA를 선거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유쾌하진 않았을 것이다.

지난 8월 7일에 발표된 미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에서는 한미FTA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나쁜 FTA’와 ‘좋은 FTA’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한적인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가 자유방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해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는 11월 4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FTA의 향방도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3. 북한문제

(1) 대북정책

이번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서는 간판을 바꿔단 우리 대북정책이 국제무대에서 첫 선을 보였다. 그 동안 이명박 대북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비핵·개방·3000구상’의 깃발이 내려지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공식적인 브랜드로 등장했다. 지난 4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 개방, 3000구상’ 등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상생과 공영의 길’에 관한 이 대통령의 구상과 7.11 남북대화 재개의 제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녁 달도 되지 않아 대북정책의 브랜드를 바꾼 데는 국내전문가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5월말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공개적인 지지 표명에 난색을 표했다. 4월 1일 이후 북한이 한국의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자, 중국정부로서도 북한이 거부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과거 햇볕정책에 대해 미·일·중·러 등 주변강대국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도 묵인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

인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온전한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한 ‘비핵·개방·3000구상’의 깃발을 내리고, 새롭게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말을 갈아탄 것이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새로운 브랜드를 부시 대통령의 방한 직전인 7월 31일에 발표한 것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다시금 국제무대에 올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의 명칭 변경 이후 8월 20일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오는 8월 25~26일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방한할 때,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바이다.

(2) 북한 핵문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주요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6자회담의 5자간의 단합되고 일관된 입장이 중요하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북한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지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 이후 현행 6자회담을 관련국간의 지역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회담이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시한을 앞두고 열렸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관심을 모았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 신고서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 및 모니터링 체제를 받아들이라고 북한에게 촉구하였다. 이처럼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검증체제의 구축 없이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효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실제로 8월 11일이 지나 미 국무부가 발효를 확정짓지 않았다.

이에 대해 8월 18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공약을 이행 기일이 지난 오늘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미 정상간의 인권 거론은) 6자회담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고 지난해 6자회담 10·3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고의적 행위”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발효시키지 않을 경우, 북한도 ‘10.3합의’에 따른 불능화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10.3합의’의 종료시한으로 합의된 10월 31일까지 북핵 검증체제의 구축이나 불능화조치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특단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테러지원국 지정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10.3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불능화된 핵시설을 원상회복하는 조치에 착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태도가 중요해진다. 한동안 베이징 올림픽의 준비에 몰두해 있던 중국에게

또다시 6자회담, 나아가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대북 압박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중간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상 사태를 방치하느냐에 따라 북핵 해결의 방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경우, 지난 2006년과 같이 북한이 제2차 핵실험 등과 같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위험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문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문제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인권법의 제정, 북한인권특사의 임명 등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 왔고,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반박하면서 서로 공방전을 벌여 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주목되는 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측의 대북 인권문제 거론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 인류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내정 불간섭 원칙과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한미정상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한은 열흘이 지난 뒤에야 반응을 내놨다. 8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떠드는 인권문제는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파탄시킬 때 나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둘러싸고 미국 내 강경파나 미 의회의 반발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미 대선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언젠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면 남북관계 경색기가 오히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했을 수 있다. 이번 북한인권문제의 제기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인권을 주요이슈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EU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거론이 계속될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한미 정상의 대북 인권 거론에 대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북미관계와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인권 거론이 보편인권 차원의 ‘말’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비난 성명이나 논평을 내는 것 이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권문제를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경험과 연계시킨 ‘행동’ 조치가 아



니기 때문에, 북한도 북미관계나 6자회담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포괄적 협력

21세기 한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협력분야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한미간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측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협정(VWP)을 연내 가입토록 미국 행정부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중대범죄 정보교환 약정’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WEST)을 한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기로 하였다. WEST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생 및 졸업 직후인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총 18개월 동안 어학연수(5개월) 및 인턴 취업(12개월), 관광(1개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연간 최대 5000명 규모로, 2009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양국 정부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WEST프로그램을 내년 초에 시행하기 위해 ‘한-미 교류확대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항공우주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 ‘국제 달 네트워크(ILN)’ 사업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의 공동연구 및 실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13년부터 4기의 달 탐사선을 발사예정이며, 우리측과는 핵심탐사 장비나 통신 등의 분야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올해 말 교육과학기술부와 NASA간 ISS에서의 공동 연구 참여를 포함한 우주협력 공동의향서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한미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넷째, 아태 민주주의 협력체(APDP) 차기회의의 한국 개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APDP는 아태지역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모임이다. 2007년 9월 부시 대통령의 주창으로 출범한 APDP는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연대기구이다. 한국은 지난 4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APDP에 참가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협력체는 중국, 북한, 파키스탄, 미얀마 등 비민주주의 국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자칫 배타적인 기구로 발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한미정상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주요국회의(MEM)’를 통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MEM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6개 국가들이 모

여 범지구적인 배출가스 감축목표와 국가별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 체이다. 하지만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참가국들은 MEM이 유엔차원의 기후변화 협상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MEM에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오는 11월 4일 미국 대선의 향방을 놓고 각국들은 자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지난 미 공화당의 부시 정권은 탈냉전 직후 8년간 집권했던 미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는 대전환(‘ABC정책’)을 단행했다. 이번에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나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대대적인 외교안보전략의 전환이 예상된다.

지난 10년의 한국외교를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정부 4년은 미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와 정책적 밀월관계를 누렸다. 하지만 마지막 1년 동안에는 ABC정책을 취한 부시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지속됐다. 노무현 정부 5년간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와 엇박자로 외교적 파열음이 내내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마지막 1년간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매케인 공화당후보와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매케인 후보는 민주주의 해양연대 구축과 일본역할론을 내세우며, 한미FTA를 지지하고 대북 압박론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오바마 후보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과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북미 직접대화를 지지하고 한미FTA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미국의 대북정책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1세기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왕이면 인내심을 갖고 미 대선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당분간은 미 대선의 귀추를 보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정책에 대해 외교안보의 걸치기 전략(Hedging Strategy)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8/08/20)

